탄 원 서

대통령 관저 이전·21그램 공사 관련

사건번호	2026고합569
담당 법원·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피고인	김건희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관한 김건희 피고인의 사건에서 사실과 법률에 맞는 신중한 판단을 구하고자 이 탄원서를 올립니다. 공적인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에서 부당한 특혜나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적 지위나 영향력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행정절차의 문제와 피고인 개인의 범죄 성립 여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혐의를 가볍게 넘겨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공모, 금품의 대가관계를 각각 충분히 증명된 범위에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2.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책임을 구분해 주십시오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 변경과 21그램의 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약 1,0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관저 공사는 공공성이 큰 사안이므로 그러한 의혹을 엄정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9일은 아직 공판준비절차 단계였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 및 증거의 입증 취지에 관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결백이 확인되었다는 뜻도, 혐의가 증명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부디 그 사이의 구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3. 업체 선정과 실제 관여 행위의 범위

특검은 관저 후보지 사전 답사, 업체 추천, 계약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누가 공사업체를 선정할 법적 권한을 가졌고, 누구의 요청이 어떤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와 피고인 사이에 과거 인연이 있었다는 사정은 조사할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분과 공적 권한의 위법한 행사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실제 결정 문서와 결재 과정, 관계자의 진술이 어디에서 일치하고 다른지를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4. 형법 제33조와 직권남용 공범의 요건

이번 재판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과,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행에 가담한 비공무원에게 공범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형법 제33조는 일정한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비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이 허용하는 공범 성립과 실제 이 사건에서 공모가 증명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의 어떠한 직권이 남용되었는지, 피고인이 그 위법한 실행에 어떤 의사로 참여했는지, 단순한 영향력 행사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행위를 어디에서 구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재판부께서 형법 제33조를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점도 그 구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무원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와, 비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범죄의 실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각자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청하지 않습니다.

5. 직권남용의 결과와 인과관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권한이 부적절하게 행사된 사정만으로 곧바로 완성되는 범죄가 아니며,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와 그 인과관계가 문제 된다고 이해합니다. 재판부께서도 2026년 10월 공판준비기일에 적용 법조를 정리하도록 요구한 만큼, 그 요건이 분명하게 심리되기를 바랍니다.

공적 계약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면 그 위법성을 엄정히 판단하시되, 특정 공무원의 권한과 행동,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법률상 결과,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공모의 범위를 각각 나누어 살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권한 행사 전체가 피고인의 실행행위로 무리하게 귀속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저의 위치나 공사업체가 변경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직권남용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와 달리 어떤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인지, 그 행위가 피고인이 참여한 공모로부터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금품수수와 대가성에 관하여

특검은 디올 제품 약 688만 원과 샤넬 가방 교환 과정의 차액 약 324만 원을 합쳐 약 1,012만 원 상당의 금품이 공사 수주와 관련된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디올 제품에 대해 약 700만 원을 사후 정산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판단해야 할 서로 다른 주장입니다.

실제 물품의 전달과 금전 정산이 있었는지, 금품 제공 당시 양측이 공사 수주와 공무원 직무 알선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을 공유했는지를 각 항목별로 구분해 주십시오. 금액만으로 무죄도 유죄도 단정하지 마시고, 대가관계를 밝히는 법률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정산 여부는 지급 시점과 방법, 금원의 출처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 주십시오. 정산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 사정 또한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피고인 개인의 책임과 양형 사정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실제 요청이나 실행의 범위, 관여의 정도, 금품의 제공·정산 경위와 결과를 개별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계약에 대한 신뢰를 해친 정도는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개인의 책임으로 더하는 일도 경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검의 주장이 모두 증명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가 증명되지 않거나 법률상 성립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범위에서는 과감히 구별하고, 인정되는 범죄에도 형법상 양형 조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8.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형법 제30조·제33조·제123조의 요건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알선수재 요건은 서로 구별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의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으려면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와 그 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모와 가담도 정확히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선수재 역시 수수사실과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관계를 법률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서 적용 법조와 증거별 입증 취지를 구체화하도록 요구한 사실은 신중한 심리를 위한 절차로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증거조사가 충분히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9. 결어

존경하는 재판부께 부탁드립니다. 공공사업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피고인 한 사람에게 귀속될 법률상 책임을 끝까지 정확히 구별하여 주십시오. 증명이 부족한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는 실제 행위와 사정에 맞는 공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관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과 공적 신뢰가 함께 걸린 이 재판을 신중히 살펴 주시는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참고자료

1. 관저 이전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

공판 보도 | 더팩트 | 2026. 10. 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형법 제33조 적용 법조 보완 요구, 증거목록의 입증 취지 구체화 요구, 11월 9일 준비기일 및 11월 23일 첫 공판 예정.

https://news.tf.co.kr/read/life/2377820.htm

2. 관저 이전 의혹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 지정

기소·재판 | 연합뉴스 | 2026. 9. 4.

피고인과 공동피고인·21그램 관련 업체의 혐의 구분, 공사 계약과 금품수수에 관한 특검의 공소 주장.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4059100004

3. 관저 이전 업체 선정·금품 제공 관련 양측 주장

공소 관련 | 뉴시스 | 2026. 9. 4.

특검이 디올 제품 688만 원 및 샤넬 교환 차액 324만 원을 대가로 의심한다는 주장, 피고인 측의 700만 원 정산 주장.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4_0003776495

4.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10. 2. 시행

비공무원이 공무원 범죄에 가담할 때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 단지 비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자동 면책되지 않음.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215073

5.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10. 2. 시행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 방해 결과의 성립요건.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455

참고자료

6.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모와 가담 등 공동정범 성립 판단의 근거.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30조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 7. 2. 시행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금품·이익 수수·요구·약속의 구성요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97243

8. 2020도1510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판결

대법원 판결 | 대법원 | 2022. 10. 27.

직권 남용의 판단 요소, 법령상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 방해 결과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시.

https://sc.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archOption=&searchWord=&seqnum=8871

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결 | 대법원 | 2019. 8. 29.

신분 없는 사람의 공범 성립과 공동가공의 의사·기능적 행위지배 등 법리. 사안이 다르므로 그대로 결론을 적용할 수 없음.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25457

10. 형사소송법 제307조 및 형법 제51조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증명 기준 및 유죄 판단이 있을 때의 양형 조건.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7&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 위 자료는 공개된 법령·판례·공판 보도입니다. 보도된 당사자의 주장은 재판부가 확정한 범죄사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소장·공판조서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